

남남갈등과 장소의 정치*

: 국립서울현충원의 사례

하 상 복**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이 국립현충원이라는 사자의 공간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두 진보정부의 등장은 한국의 보수가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관에 대한 도전적 문제제기와 보수와 진보의 이념투쟁을 가져왔다. 두 세력의 정치투쟁은 국립현충원이라는 장소에서도 전개되었는데, 국립현충원은 그 탄생의 역사에서 한국의 보수가 지향하는 이념과 기억이 응축된, 그리고 보수가 추앙하는 영웅적 존재들이 안장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진보는 국립현충원에 대한 새로운 이념적 규정을 시도하고, 그에 맞서 보수는 그 정치적 장소의 본래적 색깔을 수호하고자 했던 것이며, 그것이 곧 국립현충원을 둘러싼 갈등의 정치로 이어진 것이다.

중심어 : 남남갈등, 장소, 국립현충원, 기억투쟁

I. 들어가며: 근대국가와 국립묘지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근대국가에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단일의 정체성으로 결속해주는 상징적 기제가 무엇인가를 『상상의 공동체』에서 밝히고자 했다. 그는 “근대민족주의의 문화의 상징으로

* 이 연구는 (5·18 기념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2011년 자유과제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부교수

무명용사의 기념비나 무덤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다”(앤더슨, 2003: 29)는 명제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그 입론 위에서 우리는 특별히 국립묘지로 불리는 공간이 근대의 정치적 정체성 형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에 주목할 필요를 느낀다.

인류학적 지식에 기댈 때, 정치와 국가는 언제나 죽음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자리해왔다. 모든 정치공동체는 죽음을 특정한 정치적 형식으로 변환해내면서 지배의 상징적 토대들을 구축해 왔다. 그 모습은 근대정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근대국가와 정치가 죽음과 교차하는 방식은 전근대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과시적 공공성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전근대적 권력행사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과시적 공공성이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통치권을 [...] 민중 ‘앞에’ 과시하는 것”으로서 “표장, 용모, 거동, 수사, 한마디로 말해서 ‘고귀한’ 행동의 엄격한 행위양식과 결부되어 있다.”(하버마스, 2004[2001]: 69-70) 전근대적 권력과 죽음의 문제를 과시적 공공성의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죽음은 권력의 위엄과 정당성을 설득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였다. 혈족의 원리를 따르는 권력 승계과정에서 새로운 군주는 선왕의 죽음을 엄숙함으로 연출하고, 그의 묘지를 화려하게 축조함으로 자기 권력의 상징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전근대국가에서 정치와 죽음, 권력과 죽음의 문제는 군주와 같은 특정한 정치적 인격의 이해관계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근대국가에서 죽음이 정치 및 권력과 이어지는 맥락은 그와는 다르다. 그것은 인격이 아니라 ‘이념’의 차원에 놓여 있다. 근대국가는 본질적으로 군주로 구현되는 인격적 표상의 원리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근대국가는 특정한 ‘주의ism’ 위에 성립한 체제라는 말이다. 관련된 특성으로서, 전근대국가에서 군주가 차지해온 정치적 자리를 근대국가에서는 ‘국민nation’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란 개념은 대단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집단적 주체라는 것인데, 따라서 근대국가는 이념의 응집체인 국가를 구체화할 기제와 국가적 이념의 구현체인 국민을 재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상징에 대한 근대국가의 열정을 우리는 그와 같은 논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국가는 국가적 기념을 제정하고 의례를 규칙적으로 거행하며, 공공 건축물을 건립하고, 공적 공간에 여러 조형물들을 세우며, 다양한 형태의 국가적 표장(Emblem)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홉스봄(Eric Hobsbawm)과 동료들이 분석한 19세기 후반의 유럽은 그와 같은 정치적 상징화가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홉스봄 외, 2004).

앤더슨이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상징화의 기제들 중에서 ‘국립묘지(national cemetery)’는 매우 독특한 의미와 위상을 지니고 있다. 국립묘지는 다른 상징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민을 표상하는 정치미학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죽음이라는 미지의 현상과 사자라는 두려움의 존재를 매개로 국가적·국민적 이념을 재현하는 장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적 사자로 추앙받는 존재들이 땅 속 깊은 곳에 영면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다른 상징물보다 더 큰 정치적 정념과 감성을 산출한다. 그 곳에 투영되어 있는 국가이념은, 죽은 자의 육체성 위에서 있기 때문에 관념적 대상으로 축소, 환원되지 않는다.

역사학자 노라(Pierre Nora)와 동료들은 ‘기억의 장소(lieux de mémoire)’라는 개념으로 프랑스 근현대사의 동학을 추적했다. 프랑스대혁명에서부터 전개된 이념 대립과 충돌의 역사가 특정한 정치적 장소들 속에 기억으로 간직되어 있다는 명제 위에 서면 ‘기억의 장소’는 역사와 정치의 매듭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론적 개념이 될 수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과거가 지속되고 있다는 연속성에 대한 자각”(노라, 2010: 32)을 이끄는 장소들이 있는데, 장소들이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상징투쟁의 무대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합의된 해

석을 담고 있는 역사의 장소가 있는가 하면, 정의와 대항정의(counter-definition), 해석과 대항해석의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을 간직하고 있는 기억의 장소가 있다. 그렇게 기억의 장소는 정치적 파열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자리가 될 운명으로 남는다.

한국 국립묘지들 중의 하나인 국립서울현충원은 2천 년대 초반부터 그와 같은 기억의 장소가 되고 있다. 국립묘지라는 보편명사로 불린 국립서울현충원은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이라는 현대사의 비극 위에서 반복주의와 반공주의를 체현하는 장소로 건립되었다. 그곳은 한국 보수 세력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이념적 결집의 공간인데, 특히 보수가 추종하는 두 명의 정치적 인격인 이승만과 박정희가 거대한 규모로 안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한층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국립현충원이 지난 10여 년 전부터 시끄럽다. 그 이전까지 정치적 사자의 공간으로서 엄숙함과 고요함을 유지해왔던 한국의 국립묘지는 반공, 반복의 이념을 수호하려는 보수와 그와 같은 이념적 정체성에 도전하는 진보의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스럽다. 2005년 북한 방문단의 참배와 그에 대한 보수단체의 반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장지를 둘러싼 대립, 2011년 안현태의 현충원 안장에 대한 진보세력의 저항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다.

한국 최초의 국립묘지가 신성성의 장소로부터 적대적 세력 간 기억 투쟁의 장소로 전환된 결정적인 계기를 우리는 이른바 ‘남남갈등’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두 진보 정권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탄생사와 그 정치적 정체성을 다르게 생각하는 정치사회세력들의 물리적·상징적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켰으며, 국립묘지의 공간정치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독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최초의 국립묘지인 국립현충원은 그 역사적 탄생사에서 대한민국의 보수이념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리고 보수의 영웅적 존재들이 명면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념투쟁의 잠재성이 상존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남남갈등이 국립현충원에서 발현되는 정치적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기억투쟁의 공간정치를 추적하고자 하며, 논의는 국립현충원 탄생의 역사에서 출발한다.¹

II. 반공주의 표상, 국립서울현충원의 탄생

1948년 10월 중순,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제14연대 병사들이 육군 총사령부가 내린 제주도 파병을 거부하면서 정부군과 봉기군 사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여순사건이었다. 정부 명령을 거부한 14연대 병력들이 남로당 소속의 좌익 군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여순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좌우의 이념 대결이었다. 봉기군은 여수, 순천, 광주 등 전남의 주요 지역에서 반정부 무장투쟁을 이어나갔지만 정부군의 병력과 화력을 넘어서 수는 없었다. 신속하게 봉기를 진압한 정부는 병영 내 좌익 세력의 척결을 필두로 반공주의 사회 만들기를 시작했다(김득중 2009).

한국에서 최초로 국립묘지에 대한 구상이 나온 계기는 이 여순사건이었다. 정부는 여순사건에서 희생된 군인과 경찰을 안장할 묘지를 물색했는데, 서울의 장충단(獎忠壇)이 선정되었다. 장충단은 을미사변 이래 희생된 군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고종의 명으로 건립된 제단이라는 역사적 기원을 갖는 곳(고종실록 1900/10/27, 11/11)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서울운동장에서 합동위령제를 개

1 남남갈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갈등의 기원, 물리적 전개과정, 이념적 원리, 해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남궁영 2004; 김근식 2004, 김갑식, 2007; 손호철, 2004), 그 갈등의 상징적 측면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 연구의 의의를 볼 수 있다.

최한 뒤 345명의 전사자를, 다음해인 1949년에는 102명의 전사자를 안치함으로써(경향신문, 1949/6/7) 장충단은 국가적 추모공간으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갔다. 1950년 4월의 사당 개수 공사 실시(동아일보, 1950/4/16)와 같은 해 6월의 전몰군인 추도회 개최(동아일보, 1950/6/21)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장충단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명무실해지지만, 한국에서 국립묘지가 반공주의 이념과 결합하게 되는 최초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전쟁 초기의 군사적 열세와 패퇴로 경상도 지역까지 밀리면서 많은 군인들의 사망을 초래되었는데, 정부는 부산의 금정사와 범어사에 '순국 전몰장병 영현 안치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주간불교, 1997/6/3).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는 이상 제대로 된 묘지를 조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주관 하에 묘지 후보지 답사반을 구성해 대구와 경주 일대를 답사했다. 군은 침수 우려가 있는 등 몇 가지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1952년 5월 6일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육군 묘지 설치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다. 회의에서는 3군 통합 묘지 설치를 추진하되 그 명칭을 국군묘지로 할 것으로 결의했다(국립서울현충원, 2007: 11). 1952년 5월 26일 국방부 주관 아래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3군 합동 답사반이 편성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3일 군 묘지 설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195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답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동작동이 선정되었다. 동작동은 1953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군묘지 부지로 확정되었고, 1954년 3월 1일 정지공사를 시작한 후 3년에 걸쳐 묘역을 조성했다(국립서울현충원, 2007: 13).

정부는 1956년 4월 13일 대통령령 1144호로 '군묘지령'을 제정했다. 이 명령에 따라 전몰군인들이 안장되기 시작한다. 1956년 1월 한국전

쟁에서 사망한 신원 불명의 군인들이 최초로 안장되고, 이어서 같은 해 9월 9일 육군과 해군의 전몰군인들이 안장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2일에는 육군 전몰군인 191위의 안장이 있었다. 1963년 11월 21일과 1964년 4월 15일에는 재일학도의용군과 학도의용군 유해의 안장이 있게 된다(국립서울현충원, 2007: 196). 이와 같은 일련의 의례를 통해 국군묘지는 반공주의의 무게를 실제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었다.

한편, 박정희 정권에 들어 국군묘지는 반공주의 이념과는 무관한, 그 점에서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장의례를 개최했다. 1964년 3월 11일, 애국지사 김재근의 안장이다. 국무회의는 국방부의 제안을 논의한 끝에, 독립운동가 김재근(1964년 3월 7일 사망)을 안장하기로 결정했다.² 정부는 1957년 1월 7일, 군묘지령 개정을 통해 안장 자격의 외연을 넓혔는데³, 김재근의 안장은 그와 같은 법률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졌다.⁴

그런데, 김재근의 안장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정부는 군인이 ‘아닌’ 애국자의 안장을 승인하면서도, 묘지의 지배적인 성격인 군인묘지의 위상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국무회의는 “국군묘지에 군인 이외의 유해 또는 유골을 안치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군 묘지 설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가급적 억제하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는 권고안을 냈다(국무회의록, 1964a). 하지만 그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 국무회의는 “김재근은 국가에 공로가 현저한 애국지사로서 고인과 유가족의 소원에 따라 그 유해를 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인의 공적을 기리 추모”하기로 결정했다(국무회의록, 1964a).

3 개정된 군묘지령 제2조는 “전조의 묘지에는 [...]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순국열사 또는 국가에 공로가 현저한 자의 유골, 시체를 안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 제22조(국군묘지에의 안장) “애국지사의 유골 또는 시체는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군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안장 근거로 작용했다(국무회의록, 1964a).

두 사람의 애국지사(한흥근, 김광진)가 국군묘지에 안장되었다(국무회의록, 1964b).⁵

군인 이외, 다른 사자를 안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려 했지만 세 애국지사가 안장됨에 따라 정부는 군인묘지를 국립묘지로 명칭 변경하고 안장 자격을 한층 더 확대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1965년 3월 15일 법제처장의 이름으로 군인묘지를 국립묘지로 변경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법제처의 제안이유서는 “현재 군 묘지에는 전역장병과 특정한 애국지사의 영현만을 안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키어 전역장병 뿐만 아니라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를 전적으로 이곳에 모시고 국립묘지로 하여금 모든 애국충렬의 영령이 잠드는 애국과 헌신 및 충의의 상징지로 하여 [……]”(법제처, 1965)라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 제2092호를 근거로 군인묘지를 국립묘지로 바꾸었다(1965년 3월 30일).⁶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1965년 3월 23일에 개최된 국무회의는 법제처의 제안 이유서에서 언급된 “국립묘지로 승격시키어”란 표현을 “국립묘지로 개칭하여”로 수정 의결했다는 점이다(국무회의록, 1965a). 우리는 이 결정을 정부가 그 위상에서 군인묘지가 국립묘지보다 낮은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승격이란 곧 그 이전 것의 위상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인묘지가 지지는 국가적 가치의 무게를 지속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국 최초의 국립묘지가 본질적으로 반공주의의

5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새로운 공화정체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국민들을 통합할 민족주의 연출의 필요성에 연관되어 있었을 법하다.

6 『국립묘지령』 제1조는 “군인·군속으로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간임을 인지하게 한다. 그 역사적 기원과 배경으로 작용한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은 한국사회가 반공주의와 반북주의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서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된 사건들이었으며, 국립묘지의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인들은 그 반공주의 이념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존재들이다.

반공주의와 반북주의라는 국립묘지의 이념적 본질은 국가적 기념일을 매개로 국민들로 파급되고 확산되었는데, 현충일이 그 매개물이었다. 국립묘지는 현충일의 가치를 확산하는 무대로 기능하고, 현충일은 국립묘지에 내재되어 있는 반공·반북의 이념을 일상 속에서 재현하는 행사였다는 점에서 그 둘은 결함 없는 이념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충일은 1956년 4월 19일에 제정되었다. 군묘지령이 제정된 지 일주일만이다.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해 공휴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기 시작했다(지영입, 2004: 487). 현충일 추도사가 말해주듯이 현충일이 국민적으로 고양하고자 했던 ‘충’은 무엇보다, 북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희생이었다. 그 맥락에서 우리는 1948년부터 군에서 시행된 전몰군경 추모의례를 그 전사로 볼 수 있다. 군은 1948년 12월 1일, 제1차 전몰장병 합동위령제를 시작으로 1949년 6월 6일, 순국장병 합동위령제, 1951년 9월 28일, 제1차 육해공군 합동위령제를 개최해왔다. 따라서 현충일은 “주로 군대 내부의 행사로 치러졌던 3군 합동 위령제가 전 국민적 행사로 전환되기 시작”(김현선, 2000: 210)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현충일이 제정된 1956년 봄에는 국군묘지가 완공되어 전몰군인의 안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묘지와 추모의례 사이에 정치논리상의 조응 관계가 공식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적 전몰자 유해의 국군묘지 안장이 반복되고 그에 맞추어 추모의례를 매해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가적 사자와 그들이 구현하고 있는 이념의 확산이 규칙적으로 전개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충일의 주기적 개최는 국립묘지 제도가 대중적 차원에서 그 이념을 확산해가며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대통령의 추념사는 그와 같은 과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언어적 장치였다.

현충일 제정 첫해인 1956년의 추념사에서 이승만은 현충일을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에 비유했다. 메모리얼 데이는 남북전쟁에서 사망한 연방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적 의례라는 점에서 그 형식과 내용 모두 현충일의 모델이 될 법한 것이다. 추념사는 한국전쟁과 반공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우리는 군기도 없고 준비도 없이 적수공권으로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싸움을 한 까닭에 우방들이 우리를 도와서 지금 이만치 되고 있으며 우리 국군이 반공전선에 막강한 군사의 이름을 들고 있는 것이다(이승만, 1956).

반공주의에 대한 강조는 이후의 현충일 추념사들에서도 관찰된다. 추모 대상자들은 “반공전선에서 민족의 영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존재들로서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호국 충혼이” 된 인물들로 추앙되었다(지영임, 2004: 487). 충의 본질적 지향이 반공주의적 애국임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그와 같은 양상은 박정희 정권의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큰 변화 없이 재생산되었다. 반공주의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는 말이다. 1962년 추념사에서 군사정권의 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국의 초석이 된 여러분의 공훈에 보답하고 조국 장래의 육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러분의 유지를 계승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멸공통일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여러분들의 유지를 계승한 우리의 방위력이 강화되고, 겨레의 반공의식이 굳어짐에 따라 그네들은 집요한 간첩침략의 간책을 놓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자유민주국민의 불타는 반공의식은 그네들의 침략야욕을 기어코 분쇄하고야 말 것입니다(박정희, 1962).

이 때 언급된 “여러분”은 의심할 것 없이 한국전쟁으로 사망한 군인이다. 다음 두 해의 현충일 추념사는 그러한 이념적 강조를 다시 보여준다. 1963년의 추념사에서 박정희는 “공산침략의 환란”, “멸공을 위한 구국전선”, “조국의 위기”(박정희, 1963)와 같은 표현을 통해 반공주의적 희생과 애국을 강조해마지 않았다. 1964년의 현충일에서 박정희는 “6·25의 전화”, “공산주의의 검은 물결”, “위장된 통일술책”, “침략과 적화의 호기”(박정희, 1964)와 같은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반공주의의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위의 추념사들이 일관되게 말해주듯이 현충일은 ‘반공주의’로 압축되는 국가이념을 수호하다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날이며(지영임, 2004: 598) 그러한 의미에서 국립묘지는 그 명칭 변경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반공군인의 추모공간이었다.

우리는 1964년과 그 이후의 추념사를 비교하면 추모 대상자들의 호명에서 순국선열이 추가되는 것을 본다. 예컨대, 1966년 추념사는 “이 곳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순절하신 선열들과 [...] 이 강산을 지켜 보며 고이 잠들고 계십니다”(박정희, 1966)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순국선열에 대한 언급은 그 이후에서도 이어진다. 1965년 국립묘지가 국립묘지로 명칭변경된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된 강조점은 언제나 반공군사주의에 놓여 있었다. 1968년과 1969년의 현충일 추념사를 보면 순국선열과 반공군인을 함께 언급하면서도

그 이후의 연설은 대부분 반공군사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북괴의 준동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을 각오하고, 내 조국, 내 향토를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주국방의 태세와 역량을 비축해야 합니다(박정희, 1968).

악랄한 공산주의의 북한 괴뢰는 최근 또 다시 도발적인 만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북괴의 만행을 앉아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준동을 절대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내 향토를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주적 국방의 태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박정희, 1969).

그와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는 1974년의 현충일 추념사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아홉번째의 현충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이 엄숙한 날에 즈음하여, 우리에게 부하된 반공구국의 과제는 실로 중차대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절감하면서, 호국의 귀감이신 영령들의 충절을 우러러 추모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박정희, 1974).

이승만 정권은 군모지령을 개정해 전몰군인만이 아니라 순국열사와 국가유공자의 안장의 제도적 길을 열어주었고, 박정희 정권은 국립묘지령 제정을 통해 국군묘지를 국립묘지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군인묘지의 기능과 위상을 넘어서려했을 뿐만 아니라 항일 애국지사의 안장을 통해 국립묘지의 실질적 내용들을 채워나가고자 했다. 그럼에도 현충일을 통해 국립묘지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차원

에서 반공주의 그리고 그것과 떨어질 수 없는 군사주의의 공간으로 존재해온 것이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특히 반공주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안장되면서 국립묘지는 그 이념적 순결함과 견고함을 한층 더 확고히 다져나가게 된다. 그 점에서 그 국가적 장소는 반공주의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하는 한국 보수의 성전(聖殿)이 될 만했다.

오랜 시간 동안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유지하고 재생산해 온 국립묘지는 민주화와 그에 따른 두 진보정권의 등장으로 그 이념적 방어막의 균열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 한국의 보수는 국립묘지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남남갈등의 과정에서 국립묘지가 연루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Ⅲ. 진보정권의 등장과 남남갈등

2000년대 이래 한국 정치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이름으로 치열한 대결의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남남갈등으로 불리는 이 대립과 적대성의 핵심에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그에 관련된 정치적 행위자들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은 자율적으로 전근대 체제를 해체하지 못했고 사회경제적 근대화의 과제 또한 주도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그 역할을 대신한 정치적 주체는 일제 식민권력이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일제 식민주의가 한국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일제의 지배와 식민주의로 인해 한국은 자율적 근대화를 향한 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보의 역사 해석에 맞서 보수는 '식민지 근대성'의 이름으로,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1945년 해방 이후 근대 정치체제의 수립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대립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북한 더 나아가 세계 공산주의 블록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남한 국가의 수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특히 1950년 내전에서 남한 체제를 지켜내는 데도 중대한 정치군사적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이 보수의 역사해석이라면, 진보는 오히려 미국이 남북한 분단체제 형성과 고착화의 책임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에서 자유수호의 명분으로 양민학살과 같은 전쟁 폭력을 저지른 반도덕적 국가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그와 같은 해석은 남한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다른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진보가 통일을 달성하지 못한 결손국가와 불완전국가로 남한을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보수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위에 정립된 온전하고 완결된 국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점에서 북한은 진보세력에게는 통일을 달성해야 할 민족적 일원이지만, 보수세력에게는 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으로 등장한다.

물리력, 제도력, 정보력, 상징력 등이 결합한 정치적 패권 위에서 한국의 보수는 자신의 신념을 큰 흔들림 없이 지켜나갔다.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과의 적대성 위에서 그리고 일본과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 속에서 체제를 유지해왔다는 말이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보수는 초유의 정치적 변동과 위기를 맞아야 했다. 이념적 지평을 달리하는 김대중 정부의 등장이었다. 김대중은 한국의 보수가 추앙하는 박정희와 뚜렷이 대립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1980년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군부와 미디어에 의해 친북, 용공주의자로 각인된 ‘위험한’ 정치가였다.

보수에게서 김대중 정권을 평가할 리트머스 시험지 중의 하나는 북한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연설을 통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제

시했다. 대통령은 “냉전적 남북관계 청산”, “화해, 협력, 평화정착”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 교류”를 강조했다(김대중, 1998).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전임 정부의 정책적 스탠스와는 상당한 거리를 둔 것이었다. ‘탄력적 상호주의’로 불리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을 필두로 다양한 교류의 토대와 가능성을 만들어냈고 궁극적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로 이어졌다.

통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남북관계의 주요한 진전을 이룬 성과들이었지만 한국의 보수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다. 그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성과를 정략, 은폐, 이적성의 차원으로 해석했다.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정부가 발표했다는 점, 금강산 관광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비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점,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에게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 등이 핵심적인 쟁점들이었다(남궁영, 2004: 27).

한국의 보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관을 불순하고 위협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2001년 여름의 이른바 ‘만경대 필화 사건’은 잠재되어 있던 그들의 불만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해 평양에서 개최된 ‘8·15 민족통일축전’에 파견된 방북대표단 중 일부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조국통일3대현장기념탑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대표단 중 좌파 학자로 알려진 강정구 교수가 김일성 생가 만경대를 방문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내용의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한겨레, 2001/8/15, 8/21). 8월 21일 방북대표단이 도착한 김포공항에는 보수단체들이 모여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대표단은 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김갑식, 2007: 32-33). 공항은 보수와 진보의 물리적 충돌 무대가 되었다. 한편, 이듬해 6월에는 진보세력이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6

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하는 비극이었다. 진보세력은 반미를 외쳤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군사적으로 진압하는 것을 미국이 방조했다는 판단에서 촉발된 반미주의가 20여년 만에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정치적 대립의 국면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렸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한국의 보수에게는 또 하나의, 아니 '더 큰' 위협이었다.

첫째, 신임정부의 대북정책이 문제였다. 정부는 햇볕정책 대신 '평화와 번영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임 정부의 연속선 위에 선 정책적 노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무현, 2003) 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온 화해 분위기가 진보세력들의 준동을 가져왔다고 판단하는 보수의 시각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대북송금사건 파장이 가라앉지 않는 시점이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한층 더 예민한 문제로서 참여정부가 '친일'에 대한 민족주의적 단죄를 내렸다는 점이다. 한국의 보수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를 했다는 해석을 취하고 있었고, 그 점에서 '친일파'로 불리는 인물들은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그들을 그야말로 반민족주의자로 규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애국선열에 대한 존경만큼이나 얼굴을 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으며 "지금도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고, 역사의 진실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 (노무현, 2005: 256-257)고 있다고 고백했다.

셋째, 참여정부는 한국의 보수가 절대적 선으로 간주하는 반복주의와 반공주의에 도전했다.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직후에 발생한 제주 4·3사건은 보수에게는 '빨갱이'의 체제 전복 기도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2003년 4월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사건은 용공분자들의 음모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인민의 희생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 대통령은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노무현, 2004: 479)라고 말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이전까지 한국의 진보는 단 한 차례도 정치권력을 장악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보수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비대칭 양극 구도’(김갑식, 1997: 41) 속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개혁 정권의 등장으로 진보세력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와 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에 맞서 한국의 보수는 역전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던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참여정부 수립 후 최초의 광복절에서 두 세력은 정면으로 부딪혔다. 한 신문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제58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진보’와 ‘보수’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서로 갈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애국’을 호소했다. 자유시민연대와 예비역 대령연합회 등 보수 단체 회원들은 오후 4시 30분께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5천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국 55주년 반핵반김 8.15 국민 기도회’를 갖고 인공기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찢고 불태우기도 했다. 통일연대와 한총련, 범청학련 남측본부 소속 통일선봉대, 여중생 범대위 등 단체들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종로 1가 제일은행 앞에서 1만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전평화 8.15 통일대행진’을 가졌다(오마이뉴스, 2003/8/16).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정체성이 적나라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기사는 보수가 반북과 반공을, 진보가 반미와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남남갈등은 매우 특이한 국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대체제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헤게모니를 누리고 행사해온 보수 세력이 정치적 반대파가 되어 반정부투쟁을 이어온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남남갈등의 또 다른 특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국가적 이념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는 정치적 상징물과 장소에 연관된 상징투쟁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근대국가 일반이 그러하듯이 한국 또한 근대적 체제가 수립된 이후 국가 이념과 가치를 표상하는 다양한 상징물과 장소들을 조형해왔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정치적 상징화 과정은 무엇보다 한국전쟁과 반공주의의 시공간적 표상이었다(김미정, 2002). 전쟁과 반공주의의 정치미학은 본질적으로 남한 국가의 이념적 경계와 정치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국민적 차원에서 내면화하려는 정치적 열정의 소산이었다. 그 점에서 한국 정치에서 반공주의를 체현하고 있는 정치적 상징과 장소들은 절대적 신성성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들의 존재와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국가를 부정하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만한 것이었다.

남남갈등에서 진보와 보수는 그 국가적 상징성을 놓고 전면적인 대결을 벌였다. 한쪽은 남한 국가의 이념을 담지하고 있는 상징적 대상물들의 존재근거를 물었고, 다른 한쪽은 그것들을 방어하고 수호하고자 했다. 남남갈등의 상징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을 알리는 정치적 시간은 '2005년'이었다. 해방 60주년을 맞이하는 그 해, 남한 국가의 정체성 표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상징물이 투쟁의 무대가 되었는데, 하나는 보수가 지향하는 친미주의의 상징인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공주의와 반북주의의 장소인 국립서울현충원이었다. 한국의 진보는 그 두 상징적 공간에 대한 도전을 시도했고, 보수는 저항했다.

2005년 봄부터 인천 자유공원이 떠들썩했다. 맥아더 동상이 그 시끄러움의 원인이었다. 동상은 한국의 보수를 공고히 묶어내고 있는 친미주의와 반공주의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한국의 보수에게 항구 도시 인천은 은혜의 나라 미국의 용기와 희생으로 채워진 지역이었다. 해방된 한국을 지키기 위해 들어온 곳이 인천이었고, 한국전쟁에서 남한이 전세를 결정적으로 역전하게 되는 군사적 교두보가 인천이었다. 그곳은 공산화의 위기로부터 남한을 벗어나게 해준 상징적 장소로 등장한다. 그 점에서 미군정을 통솔하고, 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는 인천이라는 지역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정치적 영웅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정부는 맥아더 영웅 만들기를 시작했다. 1957년 5월, 그러니까 인천상륙작전 7주년이 되는 해에 각계 대표 50여명이 ‘맥아더 장군 동상 건립위원회’를 조직했다. 동상 건립에 필요한 모금액은 예상보다 빨리 모였는데(김미정, 2002: 291), 그 점은 맥아더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인천상륙작전의 날인 그해 9월 15일 동상제막식이 열렸다. 최규남 동상건립위원회 위원장은 개식사를 통해 맥아더를 찬양했다.

저 잔악무도한 공산군을 섬멸시킨 정의의 사자 맥아더 장군의赫赫한 무공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므로 본인이 여기서 또 구태여 장황한 말씀을 드리려고 아니합니다. 만일 7년 전 그 날이 없었던 들, 즉 다시 말하면 그 날을 있게 한 그가 없었던 들 한국 역사 내지 세계의 역사는 [...] 우리는 그를 정의의 승리자요, 자유의 수호자라고 예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의 창조자요 선구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맥아더장군 동상 건립위원회; 김미정, 2002: 293에서 재인용)

인천시는 같은 해 10월 3일, 동상이 세워진 만국공원을 ‘자유공원’으로 개명했다. 개항을 상징하는 공원이 아니라 “자유 수호자”인 맥

아더의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와는 달리, 한국의 진보는 보수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맥아더 동상을 민족적 비극과 치욕의 상징물로 '재전유re-appropriation'하려 했다. 진보세력은 인천이라는 도시를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들에게서 인천은 해방과 승리가 아니라 제국주의 패권과 전쟁의 기억으로 점철된 곳이었다.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날인 1996년 6월 10일에 조직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그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인천연대'는 인천을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한 역사해석 속에서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은 '자유', '정의'가 아니라 '점령', '호전주의', '학살'의 상징으로 나타난다(김진웅, 2007: 441).

이러한 대립 국면 속에서, 자유공원과 맥아더 동상은 호명되고 건립된 지 근 50년이 지나 남남갈등의 상징정치가 본격화될 것임을 알리는 무대가 되었다. 2005년 5월 10일, 진보단체 원로 20여명이 맥아더 동상 앞에서 철거와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에 맞서 보수단체들은 동상 수호를 결의했다. 그들은 제헌절에 다시 모였다. 두 적대적 단체들은 동상 앞에서 집회를 시도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외쳤다. 보수는 북한 공산주의의 '야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남한 체제를 수립하고 지켜냈다는 의미로 제헌절과 맥아더 동상의 정당성을 옹호했고, 진보는 통일국가 수립의 민족적 염원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헌절과 맥아더 동상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동상 해체와 사수를 둘러싼 상징투쟁은 양보 없이 이어졌다. 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철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싸움은 중단되지 않았다(한겨레, 2005/9/12).

한국의 정치적 근대는 친미-반공주의 위에 성립하고 유지되어왔고 그렇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보수의 관점은 어떠한 반대 해석도 용납하지 않은 채 독트린의 위상을 지녀왔다. 인천의 맥아더 동상은 남한 근대체제의 정치적 본질에 대한 보수주의의 관점을 감각적으로 재현해

주는 상징물이다. 그 점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라는 진보의 주장은 친미-반공주의 역사해석의 '진리성'에 대한 도전이었다. 한국의 진보는 정치적 상징물을 매개로 역사라는 이름 아래 가려 있던 '기억'을 끄집어내려 했다. 인천의 맥아더 동상을 둘러싼 싸움이 전개되던 때 또 하나의 상징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무대는 한국의 반공주의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었다. 그 대결의 정치는 이념과 상징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맥아더 동상을 둘러싼 갈등과 유사하지만, 국가적 죽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더 예민하고 근본적일 수밖에 없었다.

IV. 국립서울현충원과 장소의 정치

한국사회는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2005년 광복절을 맞이해야 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해 광복절 또한 어김없이 이념 대결의 무대여야 했다. 다름은 인천 자유공원을 지나 한국 최초의 국립 묘지인 국립서울현충원을 무대로 벌여졌다.

2005년 8월 12일,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대표단이 서울 동작동의 국립 현충원을 참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차관은 “북한이 지난 5일 판문점 남북연락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오마이뉴스, 2005/8/12). 북한 대표단의 현충원 방문은 그 자체만의 독립적 행사는 아니었다. 2004년 11월, 해방 60주년을 맞이하는 이듬해 광복절을 기념해 민족대축전을 개최하기로 남한과 북한 정부가 합의했으며, 묘소 참배는 그러한 축전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북한 정치인의 현충원 방문은 분단 이래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되는’ 이벤트였다. 그 상상불가능성은 국립 현충원의 역사적 기원과 이념적 본질에 연결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작동의 국립묘지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반공주의와 반북주의를 상징하는 군인들이 영면하고 있는 애국적 장소로 탄생했다. 더 멀리 올라가자면, 제주도 파병을 거부한 좌익 군인들에 맞서 싸운 '우익 군경'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이념적 기원을 갖는 곳이다. 창설된 이래 안장자격이 확대되고 추모의 성격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이념적 우익성과 군인묘지로서의 기능은 국립현충원을 관통하는 본질적 요소로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동작동 국립묘지의 역사성과 이념성을 응축하고 있는 '현충문'을 지나 '현충탑' 앞에서 참배하는 북한 대표단의 모습은 그러한 탄생사와 결코 양립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현충문과 현충탑은 반공주의와 반북주의의 이념을 가장 강력하게 응축하고 있는 조형물이다.

1968년에 착공해 1969년 4월 30일에 준공한 현충문은 1970년 6월 북한에서 침투된 간첩에 의한 폭파 시도 사건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문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반공주의의 강력한 상징이다. 1967년 9월 30일에 준공된 현충탑은 한국전쟁 전몰군인들의 위패와 무명용사의 유골이 봉안된 곳이라는 점에서 현충문보다 더 근본적인 반공주의를 체현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희생정신을 추앙하면서 동서남북 4방향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지닌 십자형으로 된, 국립 서울 현충원을 상징하는 탑"으로서 "탑의 좌우에는 화강암 석벽이 설치되어 있고, 좌측 석벽 끝에는 5인의 애국투사상이 우측 석벽 끝에는 5인의 호국영웅상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다."; 5인의 애국투사상은 "국권회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순국선열을, 5인의 호국영웅상은 "국토방위와 자유 수호를 위하여 용맹을 떨친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용사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현충탑 제단 앞의 향로는 "건국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주관으로 제작해 1968년 10월 1일 국방부 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및 고위 장성을 대동하고 이곳에 와서 헌납한 것"이며, 향로

위 원형 테두리에는 “국방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상징하는 마크가 조각되어 있다.”(국립서울현충원, 2007: 97)

동작동의 현충원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적 대립의 최전선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징적 공간”(정영철, 2007: 15)이라는 인식에 선 한국의 보수에게 북한 인사들의 국립 현충원 방문은 대단히 위협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민족적 비극의 책임자들이 희생자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은 대단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반공주의와 반북주의이라는 이념적 순결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보수의 저항은 그와 같은 정치적 명분 위에서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문제를 내전과 반공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민족화해와 통일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북한의 제의를 수용한 참여정부는 남한 내 이념 갈등의 가능성보다 민족의 불행했던 과거와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었다. 정부가 발표한 『8·15 행사 북측대표단 국립현충원 참배 설명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사는 민족적 관점에서 대단히 발전적인 움직임이었다. 첫째, “분단과 민족상잔의 불행했던 과거와 상처를 함께 치유해나가는 출발점”이며, 둘째 “남북 간 불행했던 과거의 정리는 민족적 견지에서 서로의 상처를 감싸고 하나 된 민족을 다시 복원하는 대승적 과정”이며, 셋째 “금번 참배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측의 남북 간 공존공영에 대한 의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넷째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은 진정한 화해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기회였다(6·15공동선언남측준비위원회 2005).

역사적인 민족적 행사가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그와 같은 확고한 의지 때문이었을 법하다. 6·15공동선언남측준비위원회의 성명서에는 정부의 의지가 재현되고 있었다. 성명서는 “국립현

총원은 순국선열들의 영혼을 모시고 있는 장소이자 분단체제의 비극이 집약된 곳"이라며 "이 장소에 북측의 당국과 민간 대표단이 참배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60년 동안 전개된 남과 북의 대결과 반목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미디어오늘 2005/08/13)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인사들, 그들의 현총원 참배를 인정하고 지지한, 정부를 포함한 진보단체들은 국립현총원의 역사적·정치적 본질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시도했다. 북한 대표단의 김기남 단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참배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표단이 광복절을 즈음해 방문하니 조국 광복을 위해 생을 바친 분이 있어 방문하겠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다. 남측준비위원회 또한 국립현총원을 "분단체제의 비극이 집약된 곳"이기도 하지만 "순국선열들의 영혼을 모시고 있는 곳"이라고 해석했다(프레시안 2005/08/14). 그러한 관점은 명백히, 국립현총원을 반공주의를 본질로 하는 공간이라는 한국 보수세력의 지배적 관념과 논리에 대한 도전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진보적인 인터넷 신문인 『통일뉴스』는 북한 대표단의 현총원 방문을 민족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제 남측도 북측의 '거침없는' 남북관계 발전의지에 과감히 발맞출 필요가 있다. 민족화해의 새로운 장은 남북이 함께 할 때 열리는 것이다."(통일뉴스, 2005/8/13)

8월 14일의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출발로 축전이 개최되었으며 북한 대표단은 바로 그날 현총원으로 향했다. 그와 동시에 '자유개척청년단', '북핵저지시민연대' 등과 같은 우익단체 회원들이 국립현총원으로 모여들어 반복시위를 준비했다. 그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찢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북한 대표단의 참배가 갖는, 정부가 주장하는 민족적 의미를 해체해버렸다. 반대자들은 "북측 대표단이 국립묘지를 참배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오기 전에 6·25 전쟁과 각종

테러 행위 등을 고백하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어야 한다”며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참배는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세계일보, 2005/8/20). 현충원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이려 한 또 다른 보수우익 단체 회원들도 있었다. 이들의 반대 시위를 뒤로 하고 북한 대표단은 현충원을 방문해 예정대로 참배를 진행했다. 김기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위원장, 립동욱 조평통 부위원장, 최성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성자립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등 당국과 민간에서 총 27명의 대표단이 오후 3 시경에 현충탑에서 참배를 마쳤다.

민주화가 추동해 낸 민족주의적 열정은 한국 보수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성역인 국립현충원에 그 공간의 구성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의 현충원 방문과 현충탑 참배는 물리적 차원에서는 결코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는 상징적인 차원에 연결되어 있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수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대표단의 방문은 자신들의 이념적 순결성의 공간이 ‘오염’되는 상황으로 간주될 만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정치적 오염에 대한 보수의 두려움은 그로부터 4년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둘러싸고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그로 말미암아 국립현충원은 또 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의 공간이 되어야 했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형식과 안장지가 논쟁과 불협화음의 진원지였다. 김 전 대통령의 유족은 국장을 희망했다. 문제는 한국 현대사에서 국장은 극히 예외적이었다는 점이었다. 현직을 수행하다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를 제외하면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장이 아니라 국민장 또는 가족장의 형태로 영면했기 때문이다. 그에 비춰볼 때 정부로서는 유족들의 바람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을 법하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이름으로 국민장으로 치를 것을 제안했다. “국

장은 보통 현직 대통령의 장례를 치를 때 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경우는 국민장이 선례다.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동아일보, 2009/8/19). 그런데 사태가 급반전했다. ‘국장과 국민장의 절충안’을 제시하는 언론을 뒤로 하고, 다음날 행정안전부는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국장을 치르기로 결정했음을 공표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가 엄격한 의미의 국장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국장의 법적 원칙은 9일 동안 치르는 것이었지만, 김 전 대통령의 경우는 6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부는 유족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이후에 초래될 지도 모를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 타협점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했다.

그렇지만 더 예민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전직 대통령 시신의 안장지 결정이 남아 있었다. 유족의 선택은 국립서울현충원이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이 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국가원수묘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부부 묘지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⁷ 또한 정부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했다. 전임 대통령들이 전례를 들어 국립서울현충원에의 안장을 요구한다면 사안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점에서 정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이나 그의 정치적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유족의 뜻을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을 결정했다.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현 국가유공자 묘역 하단에 조성할

7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그들의 묘는 각각 1600여 평방미터와 3600평방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였다(중앙일보 10/08/20). 그러한 공간적 제약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묘역 면적인 16m × 16.5m(약80평)을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계획”을 알렸다(조선일보, 2009/08/20). 여유 공간이 없는 국가원수묘역이 아니라 그 묘역에 근접하고 있는 터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이 왜 굳이 서울현충원 안장을 원했는지에 대한 추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적어도 정부의 제안대로 대전현충원과 국립 5·18 민주묘지라는 두 개의 대안이 그들에게 있었다.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되는 것을 원했다면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되어 있는 대전현충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유족과 측근들은 광주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반드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두 가지 논점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다면 김 전 대통령은 광주라는 정치적 공간 안으로 묶이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결코 긍정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둘째, 대전 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된다면, 김 전 대통령은 최규하 전 대통령과 공존하게 되는데, 그 모양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인격과 업적은 그와 선명한 정치적 보색대비를 이루는 존재와 함께 잠들어 있을 때 더 뚜렷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아마도 박정희 전 대통령일 것이고 그 점에서 국립서울현충원이 유일한 안장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관찰할 것처럼,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본래 국가원수를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권력의 영속적 표상공간으로서 국가원수묘역은 1965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의 안장에서 그 기원을 갖는다. 국무회의는 7월 20일 이승만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했다. “독립운동에 반생을 바쳤고”, “대통령으로 반공체제 확립에 이바지한 공헌이 지대”(국무회의록, 1965b)한 것이 안장의 이유였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뒤 박정희 대통령이 안장되는데,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중

의 하나로 ‘국장’으로 장의된 자라고 규정한 1975년 10월 13일의 개정 ‘국립묘지령’에 따라 박정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안장 이후 어떠한 전직 대통령도 국립서울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에 들어오지 않았다. 윤보선과 최규하는 각각 선영과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 점에서 김 전 대통령의 안장은 매우 중요한 예외적 사례이며, 중대한 상징성을 띠는 정치적 사건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은 국부로 호명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아버지로 불리는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 영면함으로써 정치적 상징성의 차원에서 선명하게 부각되는 의미의 구조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는 민주화의 아버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법하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한국의 보수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도였을 것이다.

보수세력에게서 국립서울현충원은 반공주의의 응축 공간이며 그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두 정치지도자가 잠들어 있는 장소다. 그와 같이 완결된 정치적 상징성이 도전받았다. 2005년에는 반공주의의 공간이라는 확정된 사실이 도전받았고, 2009년에는 자신들이 친공주의, 친북주의자로 규정한 김대중이 안장되어 자신들의 영웅들을 둘러싼 신성성에 도전했다. 어떻게 보면 2009년의 사건은 2005년 북한 대표단의 방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앞의 것이 일회적이라면, 안장은 영원한 것이고 한번 묻힌 사자를 다시 꺼내는 일은 반인륜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로서는 반공주의 이념과 양립 불가능한 인물이 반공주의의 영웅들과 공존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공식적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공식적 결정 바깥에 존재하고 있었다. 보수는 김 전 대통령의 국장결과와 안장지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수우익세력은 ‘국

민행동본부'를 결성해 국장 취소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해 온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6일은 물론 하루도 조기를 걸 수 없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김 전 대통령 국장거부운동을 전개할 것”(국민행동본부 2009/8/19)이라는 성명서 발표로 운동을 시작했다. 이어서, 대통령의 시신을 동작동에 안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국민행동본부를 포함해 라이트코리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우익단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및 현충원 안치 반대 기자회견’을 광화문에서 개최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전개해 나갔다(오마이뉴스, 2009/8/20). ‘김대중’, ‘국장’이라고 적힌 종이를 구기거나 찢어서 땅바닥에 버리는 상징적 퍼포먼스로 문을 연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좌익 활동가인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반역자로 기억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애도를 강제하는 국장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며 전체주의적 의식일 뿐”이라며 “6일은 물론 하루도 조기를 걸 수 없다”(노컷뉴스, 2009/08/20)는 독설을 쏟아냈다.

보수우익의 저항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전직 대통령의 유해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시위는 극단적인 상징폭력을 동반하면서 이어졌다. 2009년 9월 10일, 보수우익단체들 회원 100여명이 동작동 국립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친북세력의 알박기”로 규정하면서 시신을 광주로 옮기는 상여행렬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또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온 국민이 빨갱이 타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독립신문, 2009/09/11). 그들은 이어서 ‘김대중 묘지 이장 촉구 서명운동’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비 제막식 우상화 규탄 대회’를 지나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운동을 통해 극단적인 분노와 적대감을 표출했다. 해가 지나서도 김

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현충원 안장에 대한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2010년 2월 2일 오전, 김 전 대통령 묘역 뒤편 언덕의 잔디가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현장 부근에서 김 전 대통령을 친공산주의자로 표현한 한 보수단체 명의의 전단이 있었다는 사실(경향신문, 2010/2/2)로 미루어 볼 때 화재는 전직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지속적으로 반대 해온 집단들의 의도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V. 나오며: 이념갈등의 무대로서 장소

2011년 8월 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가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2묘역에 묻혔다. 그해 6월 25일에 사망했지만 곧장 안장되지 못했다. 사망한지 40일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안장 자격을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보훈처가 안장을 결정한 다음 날 서둘러 국립묘지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를 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에 그는 안장 이후에도 경건한 사자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2011년 8월 5일,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회위원회가 안씨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안장 자격을 부여한 이유들 중에는 베트남 파병과 1968년 무장공비 사살의 공으로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다(서울신문, 2011/8/6). 말하자면, 그는 '반공'을 실천한 군인이라는 것이다.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게 된 이유다. 안장 의결이 발표되자 5·18 관련 단체, 민주화 운동 단체, 민주당은 저항했다. 그들은 안현태의 안장을 무효화하고,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국립현충원의 안장 자격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일부역자와 반민주주의자들의 안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했다. 그 우려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 5공화국의 핵심적 인물들의 안장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보수가 자신들을 결집하게 하는 반공주의 이념의 드라마틱한 공간으로서 국립현충원의 정치적 존재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반면에, 진보는 그 장소에 내재하는 정치적 기억과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흔들려 하고 있음을 인식케 한다. 말하자면, 2005년과 2009년의 사자의 정치가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의 이념갈등, 즉 남남갈등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있고, 사자들의 공간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남갈등은 대체로 기원, 이념, 제도, 조직의 차원에서 관찰되고 분석되어 왔지만, 특정한 장소를 무대로 시각화되고 표상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1년의 안현태 안장이 말해주는 것처럼, 장소와 공간은 이념갈등이 촉발되고 전개되는 주요하고 중요한 자리가 된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이념대립과 갈등을 상징과 기억, 혹은 감성이 응축하고 표출되는 장소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를 인식한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1900년 10월 27일, 11월 11일.
 국립서울현충원. 2007. 『민족의 얼』 제6집.
 국무회의록. 1964a. “애국지사의 유해 군묘지 안장의 건.”(3월 10일).
 국무회의록. 1964b. “국가유공자 군묘지 안장: 애국지사 김광진.”(6월 23일).
 국무회의록. 1965a. “안건 227호.” (3월 23일).
 국무회의록. 1965b. “고 이승만 박사의 시체 국립묘지 안장의 건.” (7월 20

일).

국민행동본부. 2009. “국장(國葬) 거부운동을 선언한다.”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8월 19일).

『군묘지령』. 1956년 4월 13일.

김갑식. 2007.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23(2).

김근식. 2004. “남남갈등을 넘어: 진단과 해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과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출판부.

김대중. 1998.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엮시다.” 대통령기록관.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서울: 선인.

김미정. 2002. 『1950·50년대 한국전쟁 기념물: 전쟁의 기억과 전후 한국 국가체제 이념의 형성』. 『한국근대미술사학』 19.

김진웅. 2007. “맥아더 장군의 제2의 인천상륙작전: 동상을 둘러싼 분쟁의 함의”. 『역사교육논집』 제39집.

김현선. 2000. “‘현충일’ 추념사의 내용과 상징화 의미 분석: 1961-1979.” 『청계논총』 제2집 15호.

남궁영. 2004.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해석: 남남갈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7집 2호.

노라, 피에르 외(김인중 외 역). 2010. 『기억의 장소』 1권. 서울: 나남.

노무현. 2003.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2004. “제주 4·3 사건 관련 말씀.” 대통령 비서실 엮음.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노무현. 2005.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 비서실 엮음.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박정희. 1962. “제7회 현충일 추념사.” 대통령 기록관.

박정희. 1963. “제8회 현충일 추념사.” 대통령 기록관.

박정희. 1964. “제9회 현충일 추념사.” 대통령 기록관.

박정희. 1966. “제11회 현충일 추념사.” 대통령 기록관.

박정희. 1968. “제13회 현충일 추념사.” 대통령 기록관.

박정희. 1969. “제14회 현충일 추념사.” 대통령 기록관.

- 박정희. 1974. “제19회 현충일 추념사.” 대통령 기록관.
- 법제처. 1965.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의뢰.” (3월 15일).
- 손호철. 2004.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과 해소방안』.
- 앤더슨, 베네딕트(윤형숙 역). 2003.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 6·15 공동선언남측준비위원회. 2005. “8·15 행사 북측대표단 국립현충원 참배 설명자료.” (8월 12일).
- 이승만. 1956. “제1회 현충기념일을 마지하여.” 대통령 기록관.
- 정영철. 2007. “남북한 대립 상징의 구조와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1(1).
- 지영임. 2004. “현충일의 창출과정: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25집.
- 하버마스, 위르겐(한승완 역). 2004(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나남.
- 홉스봄, 에릭(박지향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 <경향신문> 1949/6/7, 2010/2/2.
- <노컷뉴스> 2009/06/20.
- <독립신문> 2009/09/11.
- <동아일보> 1950/4/16, 6/21, 2009/08/19.
- <미디어오늘> 2005/8/13.
- <서울신문> 2011/8/6.
- <세계일보> 2005/8/20.
- <오마이뉴스> 2005/8/12, 2009/08/20.
- <조선일보> 2009/08/20.
- <주간불교> 1997/6/3.
- <통일뉴스> 2005/8/13.
- <프레시안> 2005/8/14.
- <한겨레> 2001/08/15, 08/21, 2005/9/12.

ABSTRACT

**'Nam-Nam conflict' and the politics of place
: a case of National Cemetery(Hyonchungwon)**

Ha, Sang-Bok

(Mokpo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s and Communication, vice-professor)

This study aims to respond to why and how 'Nam-Nam conflict' of Korean Society occurred in the national cemetery(Hyonchungwon), space of the dead. The two reformist governments, People's government and Participative government have challenged to ideology and social value in which the Korean's conservatives has believed and caused to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 This conflict has deployed in national cemetery, we must think that this political place has born as one of the core places for conservatives, and exists as space in which the conservative's heroes were buried. The progressive trying to define newly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is national cemetery, the conservative has aimed to defend the its original color, this situation resulted in the political confrontation around the national cemetery.

Key-Words : 'Nam-Nam conflict', Place, National Cemetery, Conflict of Memory